



안보가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

안보전략논단

[2025년 1월호]

www.korva.or.kr

■ 발행인: 신상태 ■ 편집인: 이화수 ■ 발행처: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안보전략연구원 Vol.47(25-1) | 2025. 1. 2

무한 경쟁시대 제대군인 취업 전략
나태종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그 위험성에 대한 대비
박동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일자리 문제 개선을 위한 소고
이태호

무한 경쟁시대 제대군인 취업 전략

나 태 종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편집위원)

(충남대학교 연구교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도래와 제대군인의 취업난

2016년 1월 제네바에서 개최된 세계경제포럼(다보스포럼)에서 클라우스 슈밥(Klaus Schwab) 회장이 향후 세계가 직면할 화두로 「4차 산업혁명」을 제시한 이후 한국 사회에서도 빠른 변화가 진행되었다. 실제로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사물인터넷, 나노 기술 등의 새로운 기술들이 융·복합된 시너지 효과로 나타나 인간의 지능과 비슷하거나 앞서는 기계까지 등장하는 등 산업현장에서의 인력을 대체하고 있다.

세계 각국은 글로벌시대의 무한경쟁에서 경쟁국보다 우위에 서기 위해, 기업은 새로운 기술과 상품을 먼저 개발하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 있다. 또한 개인은 기업(구인 기관)이 필요로 하는 역량과 능력을 구비하여 취업의 관문을 통과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

문제는 4차 산업혁명시대의 도래와 함께 인공지능과 지능정보가 지금까지의 일자리

(구직·구인) 구조에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이다. 이 같은 현실은 군에서 중장기 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제대군인들도 예외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미 전역을 하여 취업을 원하고 있거나, 전역을 앞둔 현직 간부들에게는 당면한 위기로 대두되고 있다.

제대군인 본인의 입장에서서는 오직 나라를 지키고, 국가안보를 튼튼히 하기 위해 젊음과 열정을 바친 숭고한 희생의 크기만큼은 아니더라도 전역 후 안정된 제2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제대군인의 취업률은 선진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는 국가보훈부와 국방부의 제대군인 일자리 창출 및 취업지원 정책,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제대군인 취업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미흡한 측면도 있지만, 제대군인 자신이 취업을 하기 위한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취업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본인의 목표설정과 노력 여하에 따라 결정된다는 사실을 올바르게 인식해야 한다.

제대군인의 취업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의 적극 활용

최근 5년간 전역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연 평균 4,448명,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3,314명이었다. 그러나 2023년의 경우에는 장기복무자 5,420명, 중기복무자 4,061명으로 증가되었다. 이처럼 전역하는 제대군인은 늘어나고 있지만 최근 수년간 제대군인의 평균 취업률은 60% 이하로서, 제대군인의 눈높이와 기대치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제대군인의 취업률이 저조한 이유로는 군 복무의 특수성으로 인해 취업을 준비할 수 있는 여건이 제한되거나 불가능하고, 군에서의 임무수행 경력이 기업에서 요구하는 직무지식이나 자격기준과 일치하지 않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취업을 했더라도 직업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는 비정규직의 비중이 절반을 상회하고, 낮게 책정된 연봉의 일자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제대군인의 입장에서 스스로의 노력만으로 취업에 성공하기란 매우 어렵다. 그런 까닭에 제대군인이 취업의 관문을 뚫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취업과 관련한 정보를 수시로 접하고 자신의 경력과 능력에 맞는 직장을 알선해 줄 수 있는 멘토가 있어야 한다. 그 방법으로는 국방전직교육원에서 제공되는 전직상담, 진로설계교육, 전직교육(중장기진로교육, 중장기복무자 기본교육, 맞춤형 전문교육) 과정을 차례로 이수하여 기업이 원하는 인재로 추천받거나, 제대군인을 필요로 하는 일자리에 취업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육군취업지원센터, 해군취업지원광장, 공군취업정보광장 등을 진로 및 취업상담, 취업과 관련한 유용한 정보를 수집하여 활용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또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고양 등

전국 주요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국가보훈부의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해 취업에 도움이 되는 유용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받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한 취업 도전

현대사회는 무한경쟁시대이다.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자신의 꿈과 이상을 현실로 실현시키는 과정에서 선의의 경쟁을 계속하고 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 위태롭지 않다는 말처럼 제대군인들이 부하를 통솔하여 조직의 목표를 달성했던 경험을 살려 경력의 단절 없이 적시에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취업현장의 현실과 자신의 현재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난 다음 자신감을 갖고 새로운 목표에 도전하는 강한 용기와 실천이 필요하다. 이를 구현하기 위한 접근 방법으로는 군사교육과정에서 익힌 전술지식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

환언하면, 「목표의 원칙」에 입각하여 달성 가능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재평가하여 선택과 집중의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완벽하게 준비하여 취업 성공의 가능성을 극대화해야 한다. 제대군인이 취업에 성공했을 때의 뿌듯함과 보람의 크기는 군사작전에서 목표를 탈취했을 때의 그것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현직에 복무하고 있는 후배들에게도 미래에 대한 걱정 없이 오로지 군 복무에만 충실하게 하는 선순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자신의 이름값을 높이기 위한 노력 필요

제대군인들은 군 생활을 통해 명예를 지키고 선양하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것을 배우고 익혀 왔다. 그러기에 어느 경우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대군인들은 자신이 「좋아하고 잘할 수 있는 분야」에서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 자신의 적성, 능력, 취향을 살리면서 자기개발 노력을 끊임없이 배가시켜야 한다.

취업과 관련하여 미리 예단하여 좌절하거나 포기하는 것은 금물이다. 실제로 취업 직위별로 자격요건을 제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취업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 교육프로그램 이수, 직무 관련 자격증 취득 등 자신의 이름값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

군 복무를 마치고 사회에 진출한 경험에 비추어 볼 때, 군에서의 업무수행 방식을 준용하여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세우고 치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자세로 정진한다면 무한경쟁시대의 높은 취업의 장벽일지라도 능히 공략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제대군인들은 불가능을 먼저 생각하지 않았던 대한민국 군대의 간성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울러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처럼 자기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준비된 사람에게는 언제든지 새로운 기회의 창이 열리고, 양질의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명심해야 한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그 위험성에 대한 대비

박 동 순

(향군 안보전략연구원 논문심사위원)

(한성대학교 국방과학대학원 교수, 안보정책학과장)

러-우 전쟁과 한국의 입장

2024년 11월 19일을 기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1,000일이 지났다. 지난 2022년 2월 러시아는 월등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기반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해 ‘특별 군사작전’으로 기습했다. 그러나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이하 NATO) 회원국들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적극적 지원으로 장기 소모전 중에 있다. 러시아에 의한 국제질서 변경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미국을 비롯한 NATO 회원국들은 톨툴 뭉쳐 침략을 받은 약소국 우크라이나에 무기와 탄약, 군수물자를 제공해 왔다. 그러므로 러-우 전쟁은 국지전이 아닌 국제전으로 성격이 바뀌었다.

한국은 지리적으로도 먼 나라이고, NATO의 회원국도 아니지만 미국의 동맹으로서, 과거 6·25전쟁에서 지원을 받았던 국가로서 우크라이나에 군수물자와 의약품을 지원해 왔다. 한국의 대통령은 2022년부터 3년 연속 인도태평양 4개 파트너국(IP4)의 정상으로 NATO 정상회담에 참석했다. 이를 통해 “NATO 회원국들과 IP4 국가들은 대서양과 인도태평양 지역이 공동으로 마주한 도전에 맞서 보편적 가치와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공동의 의지”를 확인하였다. 이로 인해 이 전쟁에서 한국도 간접적인 당사자가 되었다.

북한의 러시아 밀착과 파병의 경과

북한은 국제적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하였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유엔에서는 제11차 총회 긴급특별회의를 소집하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결의안 제2623호를 2022년 2월 27일 결의하였는데, 북한, 시리아 등 7개국은 침략자인 러시아 편을 들어 반대에 표를 던졌다. 그러나 대한민국을 포함한 141개 국가가 찬성하였고,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을 비롯한 32개 국가는 기권하였다. 이후 북한은 장기화된 소모전으로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러시아와 긴밀한 군사협력에 착수했으며, 이를 토대로 탄약과 장비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2023년 7월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장관은 군 대표단과 함께 북한을 방문하여 김정은 위원장을 만났다. 김정은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 등 여러 무기체계를 소개했다. 이어서 같은 해 9월 김정은이 러시아 극동에 위치한 보스토치니 우주기지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했다. 이를 계기로 2024년 전반 기까지 6,700여 개의 컨테이너가 러시아로 옮겨졌다. 컨테이너에 실린 무기가 152mm 포탄일 경우 300만발 이상, 방사포 포탄일 경우 50만발 이상으로 추정되는 수치이다. 국방부는 같은 기간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넘어온 컨테이너는 이보다 30% 많은 9,000개 수준이었다고 추정했다. 정부는 “컨테이너의 내용물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식량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식료품 외에도 생필품과 북한에서 조립해 러시아에 수출하기 위한 소재·부품 일부도 있는 것”으로 추정하였다.

한편 2024년 6월 19일 푸틴 대통령은 평양을 방문하여 김정은과 북-러 정상회담을 열고, 양자 간에 합의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했다. 특히 조약 제4조에는 “쌍방 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2024년 11월 미국의 대선이 진행되면서 유력한 후보 트럼프는 “자신이 집권하면 24시간 내에 전쟁을 끝낼 수 있다”라고 장담했다. 거의 3년여 간 지속된 전쟁이 미국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인해 어떠한 형태로든 정전될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전쟁의 끝은 러시아의 완전한 승리도 우크라이나의 완벽한 방어도 아닌 형태로 마무리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즉 러시아는 현재의 우크라이나 동부지역 점령지를 인정받고, 우크라이나는 NATO 가입을 못한 채 중립국화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우크라이나는 동부전선의 고착을 타개하고 장차 있을 정전협정에서 유리한 협상력을 갖기 위해 지난 8월 6일 러시아 본토인 쿠르스크를 공격하여 약 90㎢를 점령하였다. 러시아는 양개 전선에서 전황을 호전시킬 병력 부족에 시달렸고, 군사조약을 맺은 북한군 파병이 이뤄지게 되었다.

푸틴은 ‘무력침공시 상호 지원’ 부분을 설명하면서 “최근 미국과 NATO가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를 공격하기 위해 고정밀 장거리 무기 체계, F-16폭격기와 다른 첨단무기, 러시아 영토 공격용 장비를 대규모로 공급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푸틴의 이 표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북한의 지원을 사실상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이다. 북-러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 조약의 체결로 북-러 관계는 냉전시대의 군사동맹 관계를 완전히 복원하게 됐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24년 10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현실화되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가져올 위험성과 우리의 대비

한국은 60여 년 전에 베트남전 파병을 한 경험이 있으며, 2024년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지켜보고 있다. 군의 해외파병은 명분이 가장 중요한데, 해외파병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침략자인 강자를 돕기보다는 침략당한 약자를 돕는다는 명분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6·25 전쟁 시 미국과 16개 유엔참전국의 파병이 그랬었고, 베트남전에서의 미국과 한국의 파병 또한 침략 당한 약자를 돕는다는 명분이 있었다. 그러나 이번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침략자를 돕기 위해 명분 없이 전쟁터로 내몰린 용병(傭兵)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장차 한반도 안보와 군사전략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75년 전의 6·25전쟁에서는 한국군은 미국을 주축으로 한 유엔군과 연합하여 북한군과 중공군을 상대로 싸웠다. 하지만 향후 한반도에서 또다시 전쟁이 발발한다면 러시아는 북한을 돕기 위해 포괄적 전략동반자관계 조약을 근거로 파병할 것이다. 따라서 미래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한미 연합군 및 유엔군 대 북한·중국·러시아군의 간의 전쟁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은 핵으로 무장한 직접적인 위협세력인 북한을 비롯한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에 직면해 있다. 정부는 실기하지 말고 미국 트럼프의 대 러시아 및 대북 전략팀과 협의하여 러-우 정전협상에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분리되도록 요구해야 한다. 한국은 내부적으로 ‘힘에 의한 평화’를 준비하고, 외부적으로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긴밀하게 유지하며 발전시켜야 한다.

2025년 지구상에서 목격하게 될지 모르는 참상은, 지정학적 중간 국가인 우크라이나가 강대국의 불법 침략전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고 영토가 점령당한 채 정전협정을 맺을 수밖에 없는 사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1953년 정전협정을 경험한 대한민국은 이 전쟁을 지켜보면서 70여 년 전의 6·25전쟁이나 21세기에 진행되고 있는 러-우 전쟁 역시 개별국가의 힘으로는 전쟁을 수행할 수도, 승리할 수도, 멈출 수도 없다는 점을 간과해선 안 된다. 스스로를 지킬 힘이 있어야 하고 동맹이 필요한 이유이다.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일자리 문제 개선을 위한 소고

이 태 호

(대전대학교 연구교수)

(안보군사연구원 연구위원)

2020년대 들어서면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줄어든 느낌이 든다. 물론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처우개선을 위한 연구 및 정책개발과 취업이나 창업 관련 워크숍 등은 지속 진행되고 있고, 제대군인 지원 관련 제도가 사라지거나 관련 기관에서 근무하는 인원들의 노력이 감소한 것은 아니다. 201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은 사회문제가 될 만큼 부각되었고, 우리나라의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취업률이 선진국에 비해 낮다느니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취업률이 몇 년 전에 비해 얼마나 증가하였다는 등의 뉴스가 보도되곤 하였다. 그러나 2020년대 들어서 이러한 뉴스는 거의 사라졌다. 그렇다고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취업률이 향상되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은 아니다. 2023년 한국의 고용률은 69.2%이며 이중 남성 고용률은 76.9%로 나타났다. 반면 중기 이상 복무 제대군인의 취업률이 60%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평균 고용률에도 미치지 못하며 남성의 고용률과 비교하면 훨씬 낮은 수치이다.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일자리를 위한 중앙행정부서는 크게 국방부, 국가보훈부, 고용노동부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국방부는 전역하는 군인의 일자리를 위해 인사복지실에 국방일자리정책과를 두고 전역장병 취업지원 정책개발 및 제도 개선과 장병 일자리 개발 및 취업을 지원해 주고 있으며, 국가보훈부는 제대군인국을 두고 제대군인 정책과 이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는 제대군인을 직접 대상으로 하지는 않지만 장년 및 중년에 대한 고용지원 업무를 수행하면서 간접적으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일자리 지원업무에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의 시스템대로라면 중·장기 복무 후 제대하는 군인은 전역 전에는 국방부에서 전역 전 전직 교육을, 전역 이후에는 국가보훈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취·창업 상담 등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받도록 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 31일 국토방위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전역한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를 돕고 인력개발 및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제대군인의 생활을 안정시키며 경제 사회발전을 이룩하겠다는 목적으로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그리고 제대 후 원활한 재취업과 사회복귀를 위해 2014년 ‘국방전직교육원법’을 제정하고, 2015년 1월 1일부로 국방전직교육원을 개설하여 전역 예정 장병에 대한 취·창업 교육, 취업정보 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2004년에는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현역 군인들이 국방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년 3천여 명의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 창업 등의 전직지원 실시를 목표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 5개 지역에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설립하였고, 현재는 전국 10개 지역에 제대군인지원센터가 운영되며 제대군인의 취·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2010년대 중기 복무 제대군인 수의 증가에 따라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들의 일자리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취업 및 창업 지원실적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그러나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일자리를 위한 다각적인 지원에도 불구하고 10년 이상 복무한 제대군인의 취업률은 2016년 55.9%, 2018년 57%, 2022년 대략 60% 수준으로 크게 향상되지는 않았다. 제대군인지원을 위한 법률이 제정되어 있고, 제대군인의 처우개선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 조직과 관련 기관이 편성되어 있으며, 이들 기관들이 제대군인의 일자리를 위한 각종 교육과 지원활동을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나라의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취업률이 선진국 수준에 비해 낮은 것일까? 얼마 전 ‘국가에 헌신한 전역장병의 안정된 사회정착을 위한 정책 세미나’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한국형 원호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하였다. 미국의 제대군인 우선(Veterans’ Preference) 정책 수준은 아니더라도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일자리 문제해결을 위해 다음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일자리 문제가 중요한 사회문제를 적극 알려야 한다. 청년들의 실업문제가 대두되면서 청년의 권익증진을 위해 2020년 청년기본법이 제정되었고, 국방부는 2018년부터 국방부 전직지원교육 대상을 청년 장병으로 확대하였다. 사회 고령화와 노인인구의 경제문제가 부각되면서 노인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24년 11월 1일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다. 사회취약계층으로 인식된 청년과 노인들을 위한 정부시책은 법률 제정을 통한 담보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와 각 지방단체에 청년과 고령자의 고용을 담당하는 부서를 편성하여 이들의 구직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 따라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확산시켜 10년 이상 근무한 제대군인의 일자리 문제에 국가의 많은 관심이 모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가 제대군인의 일자리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면 다양한 정책이 추진될 것이다.

둘째, 제대군인 일자리 지원을 위한 중앙부처의 업무 조정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보훈업무발전을 위해 2006년부터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왔으며 2023년에는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승격하였다. 지금 우리나라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업무는 국가보훈부 제대군인국이 담당하고 있다. 제대군인국의 제대군인정책과는 제대군인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및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제대군인일자리과는 제대군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추천하고 제대군인에 대한 직업상담 및 진로지도 업무의 총괄·조정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나 국가보훈부는 정부 내에서도 위상이 낮은 실정이며, 보훈업무는 국가보훈부와 보훈대상자간의 일이라는 인식이 강해 다른 부처와 협업과 정책 조정 및 협의가 어려운 상태이다. 그런 이유로 국가보훈부의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에서 제대군인의 일자리 지원 정책은 중요하게 부각되지 못하고 개념적인 수준의 계획에 그치고 있다. 또한 국가재정에서 보훈의 비중도 2013년 1.8%에서 2021년 1%로 낮아지고 있다. 따라서 제대군인에 대한 일자리 지원업무를 청년과 노인, 그리고 여성의 일자리 지원처럼 ‘고용노동부’가 담당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제대군인의 일자리 지원업무를 수행한다면 정부부처 간 협력증진을 통한 정책 추진의 효율성이 증가할 것이다.

셋째,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 일자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량 구비가 필요하다. 지방자치단체에는 지방경제를 담당하는 실 또는 국이 편성되어 있고 이곳에서 일자리 창출과 취·창업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청년·노인 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인원은 편성되어 있으나, 거의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제대군인 일자리 지원을 담당하는 인원은 없다. 현재는 제대군인의 일자리 지원업무를 전국에 위치한 지방보훈(지)청 보훈과와 10개의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국가보훈부는 서울특별시와 각 광역시, 제주도에 지방보훈청과 전국 21개소의 보훈지청을 두고 있으며, 제주도를 제외한 지방보훈청과 일부 보훈지청은 산하에 제대군인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보훈(지)청의 주요 업무가 보훈업무에 치중되어 있고, 중앙부처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기업과의 연계성이 낮아 제대군인 일자리 지원에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제대군인 지원을 위한 조직과 인원을 편성하여 이들의 취·창업 업무를 지원할 역량을 갖춰야 하며, 나아가 지방보훈(지)청이 담당하고 있는 제대군인 일자리 지원 관련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제대군인의 일자리 지원업무를 수행한다면 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 업무수행으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의 취업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 본지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이며,
본 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

※ 문의 : 안보전략논단 담당

☎ 02-499-0201 / korvass0201@naver.com